

#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젠더와 복지: 성역할, 고용,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황 규 성\*\*

## 〈 요약 〉

통일 이전 서독의 젠더 짜임새(gender arrangement)는 온건한 성별 분업모델인데 반해 동독은 양성평등 모델이었다. 통일 이후 독일의 젠더 짜임새는 서독지역에서는 구 모델이 지속되고 동독지역에서는 긴장이 야기되었던 시기(1990~1997),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아 서독지역에서 성분업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동독지역에서는 적응이 이루어진 시기(1998~2005), 독일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동서독 지역 모두 젠더 짜임새의 변화가 나타난 시기(2006~)로 구별된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 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분산적 수렴 현상(divergent convergence)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양독지역 모두 여성의 파트타임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자 모델로 보면 서독지역은 시간제 고용을 통해 여성의 부가 소득자 모델이, 동독지역은 맞벌이 모델이 정착되고 있다. 둘째, 보육의 사회화는 동서독 지역 모두 높아지고 있지만 동독지역은 외부적 돌봄을 동반한 맞돌봄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서독지역은 돌봄의 탈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동독지역이 앞서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 역할 인식은 크게 변동하고 있어 여성의 주요 역할을 가사와 돌봄으로 보는 보수적인 젠더관은 점점 힘을 잃어가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833).

\*\* 한신대학교 연구교수(kyuseong.hwang@gmail.com).

고 있다. 젠더 짜임새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은 고용의 양과 질로서, 구서독모델은 지속 가능성이, 구동독모델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독일의 젠더 짜임새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지역 간 차이도 여전히 남아 있다.

주제어: 독일통일, 양성평등, 성역할, 복지, 젠더, 보육서비스

## 1. 서론

독일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지만 양성평등의 성적표는 그리 신통치 않다. 교육, 노동시장, 기업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OECD(2012)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양성평등에 관한 한 독일은 우등생이 아니다.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뛰어 넘어 복지वाद도 맞닿는다. 주된 소득원이 남성이나 여성이나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들은 독일을 남성은 돈벌이에, 여성은 가족의 재생산을 맡는 (강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그려낸다(Bussemaker & Kersbergen, 1999; Lewis 1992; Sainsbury 1996). 돌봄의 형태를 중심으로 복지와 젠더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독일이 공적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돌봄의 책임이 대체로 가족과 모성에게 주어지는 유형으로 분류된다(윤승희 2012; Bettio & Plantenga 2004; Daly & Lewis, 2000; Leitner, 2003). 독일은 남성이 소득활동에 주력하고 돌봄은 주로 가족에게, 따라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복지와 젠더의 관계는 최근 들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동서독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매우 상이했던 동서독의 양성평등 및 젠더와 복지의 관계는 통일 이후 약 4반세기라는 세월이 내려앉은 동안 꺾이고 다듬어지면서 상당 부분 닮아가고 있지만 차이점도 여전히 크다. 동독지역의 양성평등은 서독지역에 한발 앞서 나가고 있고, 가구소득의 성별 구성, 돌봄 서비스의 발달정도 등 복지와 젠더의 관계는 동서독 지역 간 차이도 두드러진다. 독일의 변변치 않은 양성평등 지표들과 복지와 젠더 관계에서 드러나는 보수적 성격은 서독지역이 독일을 대표한 결과다.

거대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의 교실인 독일의 통일에서 서로 다른 젠더와 복지의 관계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글은 동서독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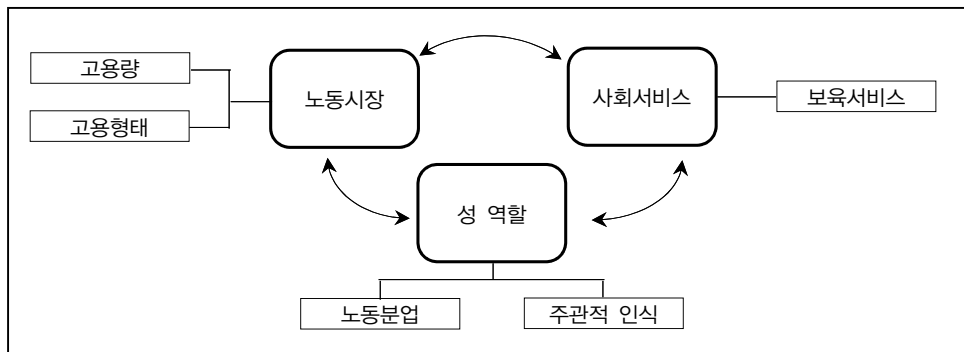
이후 젠더와 복지의 관계가 동서독 지역 간에 수렴과 분산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그 요인과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 2. 이론적 · 역사적 배경

### 1) 분석 틀

복지국가의 젠더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젠더 짜임새(gender arrangement) 개념이 유용하다.<sup>1)</sup> 젠더 짜임새는 젠더 문화(gender culture)와 젠더 질서(gender order)로 구성된다. 젠더 문화는 ① 남성과 여성 활동의 주요영역과 이들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관념 ② 이런 영역에 대한 평가 ③ 세대성과 세대에 관한 아이디어 ④ 남성과 여성 간의 존성 ⑤ 가족의 지위로 이루어지며, 젠더 질서는 젠더관계의 실질적 구조와 성별화된 노동분업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의 관계를 지칭한다. 서유럽의 젠더 짜임새 유형으로는 ① 가족경제 모델 ② 남성 외별이/가정주부 모델 ③ 여성 파트타임 돌봄미 모델 ④ 맞벌이/국가 돌봄 모델 ⑤ 맞벌이/맞돌봄 모델로 구별된다(Pfau-Effinger, 2004: pp.55-56). 이 글에서는 젠더 짜임새를 ‘성 역할이 노동 및 복지와 연계되는 방식과 수용정도’로 정의하고 [그림 1]과 같은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틀



1) arrangement는 정렬, 배열, 제도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짜임새”로 옮겨 쓴다.

성 역할은 젠더 짜임새의 핵심개념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노동분업 자체와 노동분업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동분업은 가족을 이루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시장노동(직업노동)과 가사노동(돌봄노동)의 역할분담 상태로서 복지와 젠더의 관계를 부양자 모델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주목하는 요소다. 한편, 주관적 인식은 성별 노동분업에 관한 관념, 곧 성별 노동분업 상태의 정당성을 말한다. 여기서 정당성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대다수 구성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업모델과의 일치여부를 말한다. 사회에는 “양성 간 교환형태, 남녀 모두 공유하는 ‘옳은’ 양성 간 노동분업에 관한 생활모델, 노동시장 및 가족에 양성이 통합되는 방식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합의”가 있다(Schenk, 1995: 478, Dölling 2003 재인용). 이런 측면에서 성별 분업은 암묵적으로 양성 계약(gender contract)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서독지역보다 노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구직성향이 높다고 한다(Braun et al., 1994; Fischer, 2010; Hummelsheim & Hirschle, 2010; Pfau-Effinger & Smidt, 2011; Wenzel, 2010). 이런 특징은 양성 계약의 내용이 지역별로 상이함을 암시한다.

성 분업은 무중력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와 제도라는 맥락에 놓여 있다. 성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시수준(사회구조, 소득분배 상태, 사회경제 정책 등)부터 가구수준(가구소득, 가족 수, 가정 내 권력관계 등), 개인수준(개인 성향, 학력 등 인적특성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노동과 복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 역할은 그중에서 양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이와 연동되어 있는 보육서비스의 발달 정도와 직결된다.

노동시장은 다시 고용량과 고용형태로 이루어진다. 성별 노동분업이 노동시장과 마주하는 방식은 성별로 직업노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고용형태(전일제, 시간제)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사회서비스 중에서 공적인 보육시설의 발달정도는 성별 노동분업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경계선을 어디에서 긋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여성 고용이 늘수록 보육서비스가 발달하고, 보육서비스의 발달은 또 다시 여성고용에 유리한 구조를 낳는다. 젠더와 복지의 관계에서 탈가족화 개념이 주목을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sup>2)</sup> 동독지역에서는 서독지역보다 보육시설의 양과 질이 많고 높기 때

2) 성별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도 보육 인프라 이외에 육아휴직 등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정책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 보육 인프라는 구서독이 구서독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유일한 것이었는데(한정숙 외 2012, 279), 보육인프라는 육아휴직 정책과 같이 독일 전역에 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서독 지역의 차이

문에 여성, 특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Büchel & Spiëß, 2002; Pfau-Effinger & Smidt, 2011; Schober & Spiëß, 2014).

성 역할, 노동시장, 보육의 사회화 정도(보육제도)의 묶음으로서 젠더 짜임새는 고정 불변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 젠더 짜임새는 보다 큰 맥락에서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다. 경제성장,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변화압력과 젠더 짜임새는 조응관계에 있을 수도, 긴장과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때 기존의 젠더 짜임새가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변화압력에 맞서 내구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젠더 짜임새 자체의 변화요인으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분석틀로 독일 복지국가의 젠더성격을 규명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하다. 첫째, 복지와 젠더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최근 복지국가 연구의 흐름 중 하나는 노동-복지 연관(work-welfare nexus)과 돌봄-복지 연관(care-welfare nexus)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움직임이다(Ferragina & Seeleib-Kaiser, 2011). 직업노동과 돌봄노동의 성별 배분 차원과 함께 보육서비스 차원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복지와 젠더의 관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복지국가의 젠더 성격을 정치화면으로 밝히는 데에서 벗어나 역사적 변화과정과 요인을 추적함으로써 입체적인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특히 변화 압력에 처한 젠더 짜임새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바뀌어 가는지를 그려낼 수 있다. 셋째, 젠더 짜임새는 주로 객관적-물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 관념, 신념과 같은 주관적 요소들은 젠더 짜임새의 본질적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젠더 짜임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재적 요인이다.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인지적 요소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젠더 짜임새의 성격과 변동을 보다 총체적으로 그려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 짜임새를 동서독 지역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독일을 통째로 묶어 볼 때 눈 감기 십상인 지역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포착할 수 있다.

## 2) 통일 이전 동서독의 젠더 짜임새

2차대전 이후 서독 복지국가의 길라잡이 노릇을 한 대원칙은 “남성이 사회보험에 든 전일제 고용을 통해 부인과 아이를 먹여 살리도록 함”으로써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

---

가 극명하다는 점에서 지역 간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험에 처한 기간에 사회보험을 통해 남성 소득자와 그 가족이 성취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었다(Bleses & Seelieb-Kaiser, 2004: 19; Butterwegge, 2005: 272). 따라서 남성의 돈벌이 역할과 여성의 가정주부 역할이 결합된 모델(Ernährer-Hausfrau-Modell)이 정착되어 여성은 주로 가족의 재생산을 맡았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가족이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특징은(Esping-Andersen, 1990: 27) 전통적인 가족상(像)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정책에 의지했다. 이렇다 보니 가족서비스의 사회화 정도는 매우 낮아 보육은 가족, 특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다.

서독 복지국가와 젠더 짜임새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남성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 고용형태(Normalarbeitsverhältnis) 그리고 단순한 가족형태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젠더 짜임새가 기반하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충족되었지만 이후 실업률 상승, 시간제의 확산,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복지와 젠더의 맞물림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여성을 가정주부로 전제한 사회정책 설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점 늘어나면서 복지국가의 변화요인으로 작동했다(Kaufmann, 1997: pp. 58-62). 복지국가의 위기는 복지와 젠더 짜임새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위기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와 젠더의 관계, 그리고 성별 분업을 근간으로 하는 양성계약은 1980년대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독의 젠더 짜임새는 사뭇 달랐다. 직업노동 참여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아 통일 직전인 1989년에 여성 고용률은 90%대에 이르렀다. 여성의 직업노동 참여는 양성평등과 여성해방이라는 가치관의 실현뿐 아니라 노동력 동원과 같은 경제적 동기도 작동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약 1/3이 적었지만 여성은 가구소득의 약 40%를 기여했다고 전해진다(Geißler, 2006: 307; Merkel, 1994: 372). 양성평등적 직업노동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로서 보육시설이 보편화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탈가족화가 극대화되었다. 하지만 가정생활에 양성 평등이 철저히 실현된 것 같지는 않다. 동독의 여성은 직업노동에도 참여하고 양육도 맡아 슈퍼우먼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런저런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양성평등 관점에서는 서독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비교적 평등한 노동분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동독인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져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직업노동에 종사하고 이와 연계된 공적인 보육제도는 내재화된 가치로 두루 정당성을 누리고 있었다.

일하는 엄마에 대한 가치와 규범은 동서독 사이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 이와 경제활동을 조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물질적 생활유지를 담당했던 동독의 ‘엄

마'(Mutti)와 대조적으로 서독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자기 경력에 집착하고 이기적이라는 의미에서 '매몰찬 어머니'(Rabenmutter)라는 말이 성립"했다(Merkel, 1994: 359). 이런 평가는 다소 극단적일지 모르나 여성의 직업활동에 대한 가치가 동서독이 크게 달랐음은 분명하다.

동서독의 젠더 짜임새를 비교하면 서독은 온건한 차별이 존재했던 사회로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정주부로서 (하더라도) 약간의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정책은 가족의 부양을 돕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다(이진숙, 2006). 반면 동독은 양성평등 사회로 남성과 여성인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모델이 정착되었고 남성은 심심하면 나타나는 아버지로서, 여성은 어머니로서 불균등하게 가사를 분담했고 가족정책은 공식적 아동 돌봄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직업활동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앞서 본 젠더 짜임새 유형으로 분류하면 서독은 남성 외벌이/가정주부 모델과 여성 파트타임 돌봄 모델에 속하고 (Pfau-Effinger, 2004: 58), 동독은 명백히 맞벌이/국가 돌봄 모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 역할, 노동시장(고용), 사회서비스(돌봄노동의 사회화 정도)를 기준으로 동서독 젠더 짜임새의 특징을 도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통일 이전 동서독 젠더 짜임새의 특징 비교

		서독	동독
성 역할	노동분업	분리: 직업노동(남성)과 가사노동(여성)	소득: 남성고용=여성고용, 가사노동: 여성>남성
	주관적 인식	노동분업	양성평등의 헤게모니
노동시장/ 고용	고용	남성>여성, 남성소득자 모델	남성=여성, 맞벌이 모델
	고용형태	남성 전일제, (여성 시간제)	양성 모두 전일제
사회서비스(보육)		가족화	탈가족화
전반적 특징		온건한 성별 분업	양성 평등

### 3. 통일 이후 젠더 짜임새의 변화

#### 1) 통일 적응과 젠더 짜임새(1990~1997)

서독의 성 분업 모델과 동독의 양성평등 모델이 만났던 통일은 적어도 양성평등의 관점

에서는 서독에게는 전진, 동독에게는 후퇴였다(Geißler, 2006: 324).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이중적 전환의 계기였다. 즉, 서독지역에서는 기존의 젠더 짜임새가 통일 이전부터 직면한 변화 압력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겼고, 동독지역에서는 과거의 젠더 짜임새가 통일 국면을 맞아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숙제를 잉태했다.

서독지역은 통일 이전부터 남성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가 젠더 짜임새를 위협하던 요인이었다. 늦춰 잡아도 1990년대 초반부터는 노동시장이 더 이상 남성의 소득부양 능력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입했다(Bauer, 2009: 208). 남성 노동시장의 부진한 성적표는 젠더 짜임새에 변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구조적 압력이 바로 행위패턴의 변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통일 직후 서독지역에서는 보육 서비스의 사회화는 지체되고 성역할 역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다만, 남성과 여성은 오래된 양성계약서를 전면수정하기 보다는 계약서 조항 중에서 남성의 전일제와 여성의 시간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소폭 수정하면서 대응하고 있었다.

서독지역에서 기력이 쇠해지고 있었던 젠더 짜임새가 통일과는 다소 무관하게 근근이 버티고 있었던 반면, 동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일대 전환을 맞이했다. 독일 통일의 특징은 제도이식(Institutionentransfer)인데, 동독의 젠더 짜임새도 노동시장을 필두로 보육, 성역할에 걸쳐 “아이롱 밑 와이샤쓰같이”<sup>3)</sup> 총체적인 전환 압력에 짓눌리게 되었다.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실업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상황은 매우 당혹스런 경험이었다. 일자리의 위기는 성 중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 고용률은 60% 후반대, 여성 고용률은 50% 후반대로 푹 떨어졌다.<sup>4)</sup> 전일제 고용의 비중 역시 남성은 95%대를 유지했지만 여성은 급격히 떨어졌다. 동독지역 여성은 하루아침에 “통일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sup>5)</sup> 통일이라는 태풍을 맞아 형질 변경된 젠더 짜임새는 동독지역 주민에게 정당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여성은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동독지역은 70%가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동독의 젠더 짜임새는 통일이라는 충격을 받아 비자발적으로 서독모델 쪽으로 한발 이동한 것이다.

3) 천상병의 시 <그날은-새>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4) 고용관련 지표는 [부표] 참조.

5)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여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막상 통일이 되니 일자리도 없어지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다는 의미에서 통일에서 잃어버린 자로 지칭되었다.



통일 직후 독일의 젠더 짜임새는 서독모델의 변화압력과 동독의 체제전환에 의한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적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여 서독지역에서는 통일과 관계없이 낡은 성 분업 모델을 꾸역꾸역 지켜내고 있었던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양성평등 모델이 흔들려 체제전환 특수적이며 탐탁지 않은 성 분업 모델이 이식되었다. 하지만 동독지역의 젠더 짜임새가 온전히 서독의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경로의존성이 발휘되어 상대적으로 약한 성별 분업과 내재화된 양성평등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

## 2) 사회경제적 위기와 젠더 짜임새(1998~2005)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독일은 “유럽의 환자”로 불렸고 고실업을 맞은 복지국가에는 “일자리 없는 복지”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한 때 모범사례로 불리던 사회적 시장경제가 소멸시효가 다한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회의도 흘러 나왔다. 위기의 징후는 노동시장에서 뚜렷이 감지되었다. 2005년에 기록한 실업률 11.7%는 독일연방공화국 성립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고용에 의존하던 독일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90년대에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개혁의 지체”(Reformstau)라는 담론이 유포되었다.

젠더와 복지의 관계에서도 위기와 재편이 따랐다. 이 시기에 이르면 특히 서독지역에서 수액으로 연명하던 성별분업에 입각한 젠더 짜임새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고용률 제고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는데,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사회경제적 요구와 전통적인 성 분업 모델의 긴장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전 시기부터 누적되어 온 고용위기와 젠더 짜임새가 불편한 동거를 끝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독일 정부의 가족정책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전 시기의 지지부진함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책담론을 주도하면서(Bertram et al., 2005; Rürup & Gruescu, 2003), 시간배분, 현금과 아울러 보육시설이 중요한 정책적 해법으로 등장했다. 2010년까지 독일 전역에 보육시설 23만 개를 추가로 늘이겠다는 목표로 2004년에 시행된 주간보육시설확충법(Tagesbetreuungsbaugesetz)은 방전상태에 빠진 독일 젠더 짜임새를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 자체를 갈아 끼운다는 야심찬 계

획이었다. 동서독의 젠더 짜임새가 통일 이후 1차 적응기간을 거친 후 질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젠더 짜임새의 2차 적응에서도 동서독 지역 간에는 차이점이 있었다.

통일 초기 젠더 짜임새에 걸리는 부하가 동독지역에 집중되었다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서독지역에서 야기된 긴장이 더 팽팽했다. 사회경제적 요구와 젠더 짜임새의 비정합성은 양성평등보다는 성 분업에 가까웠던 서독지역에서 더 강한 마찰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고용률 제고,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은 시대적 요구와 어긋나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면으로 치달았지만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었다. 다만, 이런 젠더 짜임새에 대한 정당성은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노동시장 상황과 같은 객관적 물리적 젠더 짜임새를 바라보는 주관적 젠더 짜임새 불어온 미풍은 이후 변화를 잉태할 거름이 되었다.

통일 이후 약 7~8년 동안 적응기간을 거친 동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이제 내성이 불기 시작했다. 노동시장, 보육 서비스 등 객관적 물리적 차원의 젠더 짜임새는 급속히 구서독의 것을 닮아가고 있었다.

통일 이후 8년~1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독일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성 분업 모델의 생명력이 다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구서독의 모델도, 구동독의 모델도 그 온전한 모습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내구력을 갖추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

### 3) 사회경제체제의 부활과 젠더 짜임새(2006~)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독일이 부활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독일이 터보엔진을 달았다고 하고, 2009년 금융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슈퍼스타로 거듭났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누구는 개혁 덕분이라고 하고, 누구는 국제경쟁력을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이유는 다양하게 찾지만 적어도 독일의 사회경제체제가 건재하고 강력함을 보여주었다.

젠더 짜임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전 시기에 이미 전통적 성 분업 모델은 파산신고를 한 것과 다름없었다. 가족정책 개혁도 본궤도에 올라 주간보육시설확충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메르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서독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집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8년에는 보육시설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만들어져 2013년 8월부터 아이들 둔 부모는 법적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담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성 분업 모델에 종말을 고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젠더 짜임새의 변화는 또 다시 동서독 지역별로 편차가 드러났다.

서독지역 노동시장은 탄력을 받았다. 파트타임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늘어나면서 성 역할에 관한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서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보육시설의 대폭확충에 힘입어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를 보여 서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를 더 이상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로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맞벌이 모델로 갈아탄 것도 아니다.

통일 이후 줄곧 낮은 환경에 시달리면서 숨 가쁘게 달려 온 동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독일 전체의 경제적 부흥을 맞았다. 통일 이후 약 15년을 버티면서 동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서독지역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구동독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고용률이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완전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참여 형태에서는 격차가 꽤 크다. 객관적 물리적 젠더 짜임새 이면에, 주관적 젠더 짜임새는 여전히 양성평등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통일 이후 잠재되어 있던 양성평등 가치가 호황을 맞아 부활하면서 ‘연기된 경로의존성’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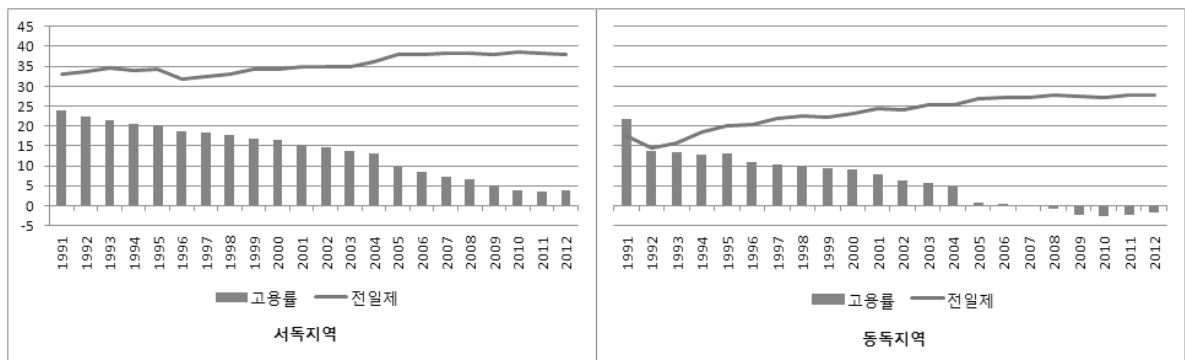
## 4. 통일 이후 젠더 짜임새의 수렴과 분화

### 1) 젠더 짜임새 변화의 양상

통일 이전 동서독의 젠더 짜임새는 통일 이후 앞서 살펴본 역사적 과정을 거쳐 지역별로 한편으로는 지속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젠더 짜임새의 구성요소 중 무엇이 얼마만큼 다르고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첫째, 노동시장 측면은 젠더 갭 개념으로 파악하면 보다 선명해진다. [그림 2]에서 보듯 동서독 지역 모두 고용률 젠더

갭(남성 고용률에서 여성 고용률을 뺀 수치)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전일제 젠더 갭(취업자 중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비중의 성별 격차)은 늘어나고 있다(수치는 [부표] 참조). 독일 전역에서 고용률 자체의 성별 격차는 줄어드는 반면, 전일제로 일하는 비중의 격차는 늘어 여성이 주로 시간제로 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향 자체는 같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무시하기 어렵다. 동서독 지역 모두 고용률 젠더 갭의 하락이 전일제 젠더 갭의 상승을 동반하지만 동독지역은 여성의 고용률이 최근에는 남성을 역전했으며 전일제로 일하는 비중의 성별 격차도 서독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남성은 전일제로 일하고 여성은 가정주부나 약간의 경제활동을 하는 구서독모델의 특징이 가정주부가 약간의 경제활동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구 모델의 특징을 유지한 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면, 동독지역에서는 양성평등이 고용률에서는 실현되고 있지만 전일제 비중에서는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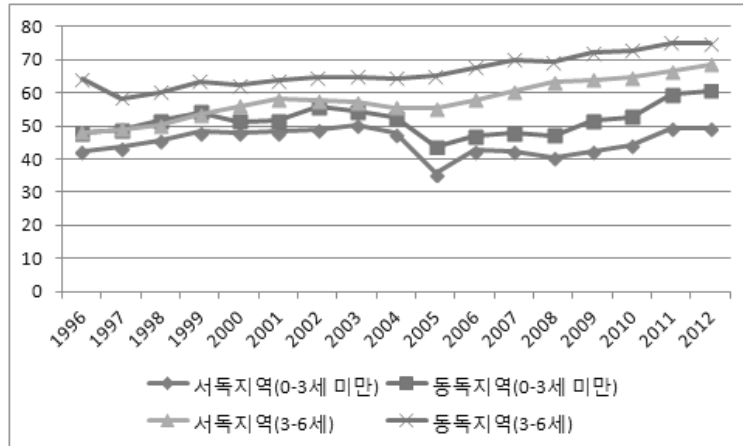
[그림 2] 동서독 지역의 고용 젠더갭



자료: WSI GenderDatenPortal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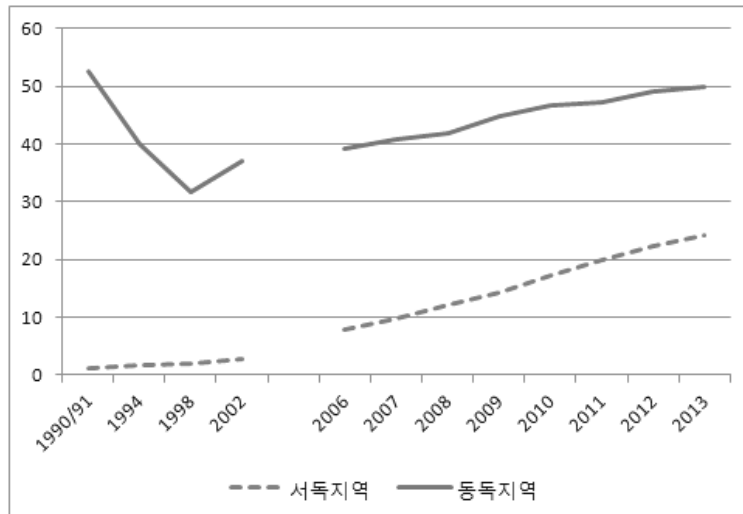
범위를 좁혀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고용률 차이를 [그림 3]에서 아동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동서독 지역 모두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양 지역 모두 높아지고 있으나 그 차이는 커지고 있다. 3세에서 6세까지 아동을 둔 여성의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독지역의 경우 2007년에 70%에 도달한 이후 2011년에는 75.1%에 이르러 4명 중 3명이 일하고 있다.

[그림 3] 동서독 지역 유자녀 여성 고용률 추이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그림 4] 동서독 지역의 보육 인프라



주: 2002년까지는 아동 100명당 이용가능한 어린이집 자리 수, 2006년부터는 보육시설 이용률<sup>6)</sup>  
 자료: DJI(2005); BMFSFJ(2012: 39); Statistisches Bundesamt(2014: 116).

둘째, 고용 및 성별 분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발달정도(보육시설 인프라)를 위의 [그림 4]를 통해 확인하면, 3세 미만 아동 100명당 어린이집 자리 수는 통일 초기부터

6) 시기별로 자료가 다른 것은 독일에서 보육 인프라를 조사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이가 컸지만 2006년 이후로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돌봄의 탈가축화는 서독지역에서 두드러진데, 이는 전통적인 성분업 모델이 기반을 잃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다. 그러나 동서독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매우 커서 고용의 젠더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반으로서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3년 현재 동독지역이 서독지역의 2배에 이른다.

셋째, 젠더 짜임새의 핵심요소로서 성별 분업은 일하는 형태와 가구 소득 기여도 두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 서독지역 가구는 양성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비중은 20% 중반대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데 반해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반대로 남성만 돈벌이를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동독지역 가구 중에서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비중은 통일 당시 65%였으나 이후 40%대로 줄어들었고 남성 전일제와 여성 시간제가 결합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늘어나고 있다. 양독지역 모두 맞벌이 비중은 늘어나고 외벌이 비중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동서독 지역 가구의 취업형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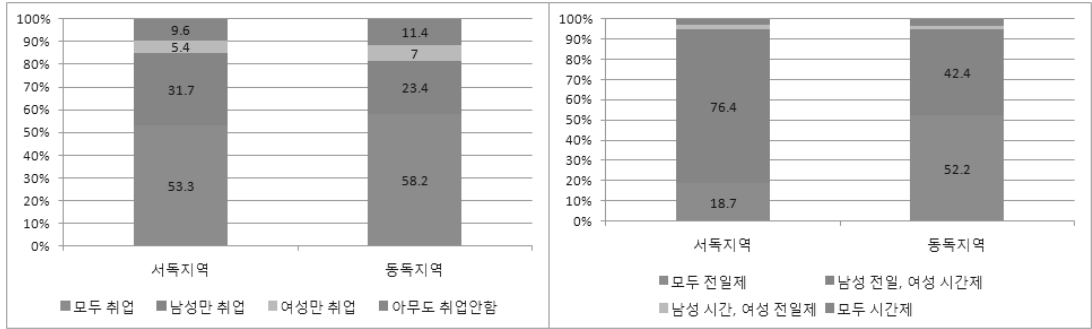
	서독지역			동독지역		
	1990	2000	2007	1990	2000	2007
모두 전일제	22	24	23	65	44	41
남성 전일제/여성 시간제	26	30	40	16	14	28
남성 전일제/여성 비경활	34	26	20	13	9	6
남성 전일제/여성 실업	2	2	3	0	11	7
남성 시간제/여성 전일제 또는 시간제	1	2	4	2	1	3
남성 비경활/여성 전일제 또는 시간제	8	7	3	4	6	4
남성 실업/여성 전일제 또는 시간제	2	2	3	0	7	4
모두 비경활 또는 실업	5	7	3	1	9	6
기타	0	0	1	0	0	1
맞벌이 비중	49	56	67	83	59	72
외벌이 비중	4	4	6	0	18	11

자료: Klenner(2009).

2010년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그림 5]에서 보듯 양성 모두 취업한 가구의 비중은 엇비슷한데 남성만 취업한 가구의 비중은 서독지역이 높다. 그런데 양성 모두 일하는 가구의 성별 취업형태는 사뭇 달라서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비중은 서독지

역이 낮고 동독지역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림 5] 동서독 지역 가구의 취업형태(18세 미만 유자녀 가구 기준, 2010)



자료: Keller & Haustein(2012).

가구원의 취업활동에서 나타나는 동서독 지역의 수렴과 분화는 성별 가구소득 기여도로 연결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면 가구 소득 중에서 남성소득 대비 여성의 기여도는 동서독 지역 모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적지 않아, 서독지역은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이 20% 후반대에서 30% 중반대에 머물러 있으나 동독지역은 60%대에서 75%에 이른다. 양독지역 모두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동독지역이 훨씬 앞서 있다.

[표 3] 동서독 지역의 성별 가구소득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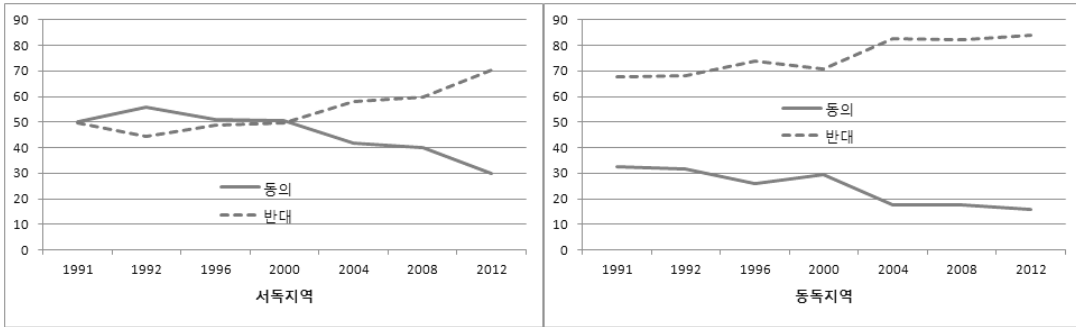
		서독지역		동독지역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 비중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서독지역	동독지역
전 가구	1990	64	17	52	32	26.6	61.5
	1996	59	19	42	27	32.2	64.3
	2002	58	20	41	31	34.5	75.6
유자녀(3~6세) 가구	1998	64.7	13	52.3	32.1	20.1	61.4
	2008	61.9	17.9	48.8	32.3	28.9	66.2

자료: Trappe & Sorensen(2006: 652), Schneider et al(2013).

젠더 짜임새의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성역할 인식의 변화도 눈에 띈다.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명제에 동의여부를 물어본 결과 서독지역은 2000년까지

찬반이 비슷했으나 그 이후 반대의 목소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초기부터 반대가 압도적이었는데 2004년 이후 더욱 벌어졌다.

[그림 6] 성역할 인식의 지역 격차(%)



자료: Allbus(Allgemeiner Bevoelkerungsumfrage).

성역할 인식도 바뀌고 여성 고용도 늘어가는 현상은 공통적이지만 확대일로에 있는 시간제 고용의 이유에는 유사성도 있지만 차별성이 눈에 띈다. 양성 모두 전일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간제로 일하는 비중은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훨씬 높다. 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문제는 주로 노동공급측이 아니라 노동수요측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이 시간제로 일하는 이유로서 서독지역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함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 반해 동독지역 여성은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서독지역의 반에도 못 미친다.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더라도 지역 간 차이는 적지 않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동서독 지역의 시간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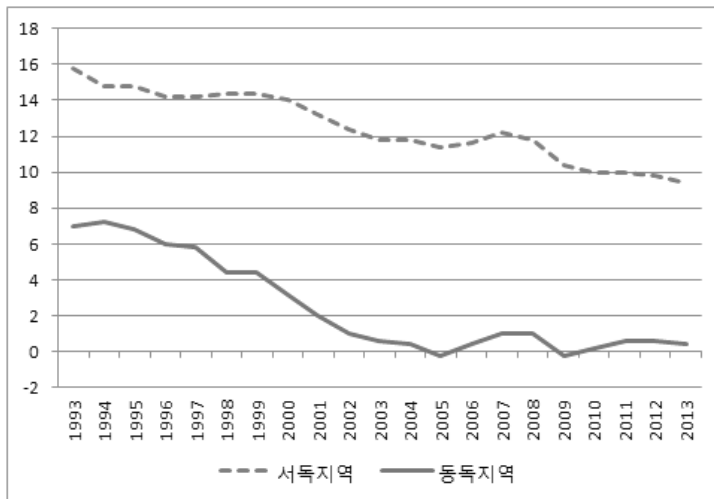
시간제 사유	서독지역				동독지역			
	2004		2012		2004		201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일제를 못 찾아서	23	9	21.1	9.3	46	57	41.7	38.7
교육훈련	24	4	18.3	3.6	15	5	16.9	5.4
가족 돌봄	13	63	10.4	56.3	4	20	4.6	25.5
질병	5	2	7.8	2.0	9	2	6.9	3.1
기타	10	16	42.5	28.8	20	14	30	27.3

자료: BMFSFJ(2005, 124), WSI GenderDatenPortal.



여기에서 일자리 중에서 사회보험에 든 일자리의 비중의 성별 격차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 일자리의 비중이 성별로 차이가 난다면 이는 사회보험 기여에 대한 성별 젠더 갭을 의미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생활의 독립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족을 이루더라도 여성이 남편에 팔려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각각 따로따로 가입하는 경우는 생활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더구나 사회보험은 독일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젠더 짜임새가 복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사회보험 기여도(노동자 중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성별 구성비의 차이)의 젠더 격차를 살펴보면 동서독 지역 모두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서독지역은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는데 반해, 동독지역은 이제 차이가 없어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동독지역 여성의 전일제 비중은 사회보험 젠더 갭을 ‘제로’로 만들면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라는 용어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그림 7] 동서독 지역 사회보험 젠더 갭 추이(%p)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 Bevölkerungsfortschreibung 재구성.

## 2) 수렴과 분화의 특징과 메커니즘

통일 이후 젠더 짜임새의 동서독 지역 간 수렴과 분산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자 모델로 파악하면 독일 전체적으로 시간제 노동이 확산되면서 여성 고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지역별 차이도 엄연히 존재한다. 서독지역은 기존의 남성 외벌이 모델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 남성은 전일제로, 여성은 시간제로 일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의 가구소득에 자신의 소득을 얹는 부가소득자모델(Zuverdienermodell)이 정착되고 있다. 반면 동독지역은 과거의 맞벌이 모델(Zweiverdienermodell)이 축소된 형태로(동독시절의 고용률에는 못 미친다는 점에서) 부활하고 있다. 가구소득 기여도를 고려하여 굳이 표현하자면 서독은 1.3 소득자, 동독은 1.7 소득자 모델로서 중간지점을 향해 수렴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변화와 아울러 젠더 짜임새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보육의 사회화는 동서독 지역 모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시설 이용률은 동독지역이 서독지역에 훨씬 앞서 있다. 동독지역은 외부의 아동돌봄을 동반한 맞돌봄 모델(Doppelversorgermodell mit externer Kinderbetreuung)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서독지역은 뚜렷이 성격규정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여성의 돌봄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돌봄의 탈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의 속도와 폭이 획기적이진 않더라도 독일의 전통적인 모성주의로부터는 이탈하고 있음이 틀림없다(Ostner, 2009). 셋째, 여성의 주요 역할을 가사와 돌봄으로 보는 보수적인 젠더관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동독지역은 과거의 젠더관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라 치더라도 서독지역의 변화는 상전벽해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사회보험 젠더 갭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동서독 지역 간 격차는 적지 않아 서독지역의 여성들은 동독지역의 자매들보다 남성 의존도가 높다. 동독지역 여성들은 남성의 소득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활을 누릴 기반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이 같은 변화양상은 동서독 지역의 젠더 짜임새가 서로 다른 가운데 모아지는 현상(divergent convergence)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서독 지역 간 분산적 수렴은 구서독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구동독 모델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고유한 특징을 부분적으로 유지한 채 중간지점으로 만나가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추동하는 요인과 메커니즘은 지역별로 달리 나타난다. 서독지역의 경우에는 젠더 짜임새의 구성요소 가운데 남성 노동시장이 통일 이전부터 줄곧 변화의 중요한 추동요인이었다. 남성의 정규직 완전고용이 성별 분업과 보육서비스의 저발달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직후인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이 남성의 소득부양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구서독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

다. 이에 따라 서서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졌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서 2000년대 이후 성역할 인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2005년 이후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은 정책적 영향도 크게 작용했지만 통일 이후 누적된 젠더 짜임새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즉, 남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를 출발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성역할 인식의 변화, 보육시설의 확충을 동반하면서 서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온건한 성별분업 모델에서 여성의 부가소득자 모델과 돌봄의 탈가족화로 나아가고 있다.

동독지역의 경우에도 통일 직후 노동시장의 충격이 젠더 짜임새의 변화를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마찬가지였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높은 고용률을 중요한 축으로 삼았던 동독 젠더 짜임새는 대량실업으로 인해 이미 크게 흔들렸다. 대량실업은 성 역할 인식 및 보육의 사회화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젠더 짜임새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비정합성을 노정시켰다. 이런 비정합성에 대하여 동독지역에서는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더라도 비정합성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어긋남은 조건이 변화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다. 고용률 젠더 갭이 2005년 이후 '0'에 접근했다는 점, 3~6세 유아녀 여성의 고용률이 2007년 이후 70%를 넘었다는 점, 보육시설 이용률이 50%에 근접했다는 점 등은 동독모델을 회복하는 징후들이다. 동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성역할 인식과 보육의 사회화를 유지한 채 노동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축소 또는 변형된 형태의 맞벌이 모델로, 외부의 아동돌봄을 동반한 맞돌봄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상황이 서독의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 모델이나 동독의 양성 전일제/공적 보육 모델 중 어느 것으로 회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성의 전일제 고용으로 가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도,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전일제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앞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독지역은 이제 남성 노동시장이 크게 회복되더라도 과거 모델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 역할 인식도 크게 바뀌었고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되어 가는 마당에 성 분업 모델은 타당성을 크게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독 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경로의존을 벗어나 경로형성(path shaping)에 접어들어 일종의 불가역성을 띠게 되었다. 양독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향후 노동시장 상황, 성역할, 보육의 사회화에

따라 또 다시 재편될 것이다. 그중에서 인식의 변화는 괄목할 만한데,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 걸쳐 남성 외벌이 모델이 생명을 다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약 60%에 이른다(Bertelsmann Stiftung, 2011). 덧붙여 여성의 역할을 가족의 재생산으로 한정하는 관점은 양독지역에서 모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젠더 짜임새가 변신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현 시점에서 판단해보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독일 젠더 짜임새의 최종 목적지가 맞벌이-제도적 돌봄 혹은 맞벌이-맞돌봄(dual breadwinner-institutional[dual] carer) 모델이라면 동독지역은 서독지역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 5. 결론: 이론적 · 정책적 함의

결론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젠더 짜임새의 지속과 변화는 역사적 · 사회적으로 배태된다. 젠더 짜임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메커니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논리에 의해 몰역사적(ahistorical)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동서독 지역 간 젠더 짜임새에 분산적 수렴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배태성을 반영한다.

젠더 짜임새의 역사적 · 사회적 배태성은 우리 사회정책의 설계에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성역할 분담, 노동시장, 보육서비스가 상호작용한다는 명제는 일반적으로 타당하겠지만 이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 즉 젠더 짜임새는 시공간에 따라 다를 터인데, 이때 한국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육 인프라와 보육시설 이용률은 최근 가족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성고용 확대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조건들, 그럼으로써 연구의 대상 자체로 별로 주목받지 않고 있는 것들에 해답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중요한 의사결정은 해지고 나서 폭탄주와 함께 이루어지는 기업의 관행,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굳건한 신념들이 한국 젠더 짜임새에 동맥경화를 낳고 있을지 모른다.

둘째, 동서독 지역의 젠더 짜임새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유지한 채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독지역의 경우에는 통일과 관계없이 한계에 직면한 젠더 짜임새가 생

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진적 변화가 누적되어 질적인 전환을 낳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반면 동독지역의 경우에는 체제전환과정에서 구동독의 젠더 짜임새가 특징을 유지한 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동서독 지역 모두 과거의 젠더 짜임새에 동지를 튼 채 다른 듯하면서 닮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적 관점에서는 지역실정에 적실성 높은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에게 지역 사회정책(kommunale Sozialpolitik)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개발연대의 유산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지역정책이라 함은 지역개발 혹은 지역발전 정책으로 등치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구나 국가 수준의 사회정책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사회정책은 다소 성급한 제안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정책의 궁극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국가 수준의 사회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맞는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의 선순환 관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면 이는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다. 선순환 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노동시장 상황, 복지, 젠더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과 관련한 함의로서, 제도의 이식이 작동의 이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 독일의 젠더 짜임새는 시기별로 통일 이전 동서독 젠더 짜임새의 특징이 지속과 변화를 보이며 전개되어 오고 있다. 제도는 이식되더라도 그 제도가 일방적으로 안착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짜임새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창발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정책을 통일이라는 거대한 이벤트에 대비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한반도의 통일을 가정할 때 독일 사례를 원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체제의 성격 자체가 워낙 다르다 하더라도 통일 한반도의 사회정책을 구상할 때 통일 이후 새로운 질서가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윤승희(2012). 돌봄을 통해 본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 돌봄의 제도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6, 31-59.
- 이진숙(2006).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58(4), 93-118.
- 한정숙, 홍찬숙, 이재원(2012). *독일 통일과 여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홍찬숙(2011). 시간제 고용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적합한 방법인가? 구동서독 지역 여성노동시장 비교를 통한 접근. *경제와 사회*, 90, 363-386.
- Bauer, Nina(2009). Konsequenzen der Verlusts des ganzeheitlichen Denkens: Soziale Marktwirtschaft und die Triade Arbeitsmarkt, Sozialstaat und Geschlechterbeziehungen am Beispiel von Westdeutschland. Seifert, Hartmut & Struck, Olaf eds.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k. Kontroversen um Effizienz und soziale Sicherheit*. Wiesbaden: VS Verlag.
- Bertram, Hans, Rösler, Wiebke & Ehlert, Nancy(2005). *Nachhaltige Familienpolitik. Zukunftssicherung durch einen Dreiklang von Zeitpolitik, finanzieller Transferpolitik und Infrastrukturpolitik*.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Bettio, F. & Plantenga, J(2004). Comparing Care Regimes in Europe. *Feminist Economics*, 10(1), 85-113.
- Bleses, Peter & Seeleib-Kaiser, Martin(2004). *The Dual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Welfare Stat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MFSFJ(2005). Gender-Datenreport.
- BMFSFJ(2012). Vierte Zwischenbericht zur Evaluation des Kinderförderungsgesetz.
- Braun, Michael, Jacqueline Scott & Duane Alwin(1994). Economic necessity or self-actualization? Attitudes toward women's labour-force participation in East and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0(1), 29-47.
- Büchel, Felix & Katharina Spieß (2002). Form der Kinderbetreuung und Arbeitsmarktverhalten von Müttern in West-und Ostdeutschland. Stuttgart: Kohlhammer. Vierteljahres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71, 95-113.
- Bussemaker, Jet & von Kersbergen, Kees(1999). Contemporary social-capitalist welfare states and gender inequality. Sainsbury, Diane(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Oxford Univ. Press.
- Butterwege, Christoph(2005). *Krise und Zukunft des Sozialstaates*, 2. durchgesehene Auflage. Wiesbaden: VS Verlag.

- Daly, Mary & Jane Lewis(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
- DJI(Deutsches Jugendinstitut)(2005). *Kindertagesbetreuung im Spiegel der Statistik*. Muenchen, Dölling. Irene(2003). Ostdeutsche Geschlechterarrangements in Zeiten des Neoliberalismus., *Potsdamer Studien zur Frauen- und Geschlechterforschung*. 7(1), 7-32.
- Esping-Andersen, Gøsta(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inceton Universit, Press.
- Esping-Andersen, Gøsta(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Cambridge: Polity Press.
- Farragina, Emanuele & Martin Seeleib-Kaiser(2011). Thematic review: welfare regime debate: past, present, futures? *Policy & Politics*. 39(4), 583-611.
- Fisher, Pamela(2010). Women and employment in East Germany: the legacy of GDR equality, *Journal of Social Welfare and Family Law*. 32(4), 401-409
- Geißler, Rainer(2006).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Zu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mit einer Bilanz zur Vereinigung*. 4. überarbeitete und aktualisierte Auflage. Wiesbaden: VS Verlag.
- Gille, Martina & Jan Marbach(2004). Arbeitsteilung von Paaren und ihre Belastung mit Zeitstress, Statistisches Bundesamt (ed) *Alltag in Deutschland -Analysen zur Zeitverwendung*. Band 43 der Schriftenreihe Forum der Bundesstatistik. Wiesbaden.
- Hummelsheim, Dina & Jochen Hirschle(2010). Mother's employment: Cultural imprint or institutional governance? *European Societies*. 12(3), 339-366.
- Kaufmann, Franz-Xaver(1997). *Herausforderungen des Sozialstaates*.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Keller, Matthias & Thomas Haustein(2012). Vereinbarkeit von Familien und Beruf. *Wirtschaft und Statistik, Januar*, 30-50.
- Klenner, Christina(2009). Wer ernährt die Familie? Erwerbs- und Einkommenskonstellationen in Ostdeutschland. *WSI Mitteilungen* 11/2009. 619-626.
- Leitner, Sigrid(2003).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4), 353-375.
- Lewis, Jane(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 Merkel, Ina(1994). Leitbilder und Lebensweisen von Frauen in der DDR. Hartmut Kaelble, Jürgen Kocka & Hartmut Zwahr eds. *Sozialgeschichte der DDR*. Stuttgart: Kietze-Cotta.
- OECD(2012). *Closing the Gender Gap*.

- Offe, Claus(2006[1977]). *Strukturprobleme des kapitalistischen Staates. Aufsätze zur Politischen Soziologie, veränderte Neuauflage*. Frankfurt am Main: Campus.
- Ostner, Ilona(2009). Abschied vom Maternalismus? Zur sozialpolitischen Neujustierung des Verhältnisses zwischen Familie und Gesellschaft im »konservativen« deutschen Wohlfahrtsstaat. Obinger, Herbert & Rieger, Elmar (eds.) *Wohlfahrtsstaatlichkeit in entwickelten Demokratien*. Herausforderungen, Reformen und Perspektiven. Frankfurt am Main: Campus.
- Pfau-Effinger, Birgit & Maike Smidt(2011). Differences in women's employment patterns and family policies: eastern and western Germany. *Community, Work & Family*, 14(2), 217-232.
- Pfau-Effinger, Birgit(2004). *Development of Culture, Welfare States and Women's Employment in Europe*. Aldershot: Ashgate.
- Rürup, Bert & Gruescu, Sandra(2003). *Nachhaltige Familienpolitik im Interesse einer aktiven Bevölkerungsentwicklung*.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Sainsbury, Diane(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enk, Sabine(1995). Neu- oder Restrukturierung des Geschlechterverhältnisses in Ostdeutschland? In: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5(4), 475-488.
- Schneider, Norbert, Ralina Panova & Stine Waibel(2013). Kein Abschied vom männlichen Familienernährer. *Bevölkerungsforschung*, 03/2013.
- Schober, Pia & Katharina Spieß (2014). Local day-care quality and maternal employment: Evidence from East and West Germany. *SOEPPapers*, DIW Berlin.
- Statistisches Bundesamt(2014).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tätige Person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öffentlich geförderter Kindertagespflege am 01.03.2014*.
- Bertelsmann Stiftung(2011). Auslaufmodell: Familienvater als Alleinverdiener. <http://www.bertelsmann-stiftung.de/de/presse-startpunkt/presse/pressemitteilungen/pressemitteilung/pid/auslaufmodell-familienvater-als-alleinverdiener/>(검색: 2015.2.11).
- Trappe, Heike & Annette Sørensen(2006). Economic relations between women and their partners: An East and West German comparison after reunification. *Feminist Economics*, 12(4), 643-665.
- Wenzel Stefanie(2010). Konvergenz oder Divergenz? Einstellung zur Erwerbstätigkeit von Müttern in Ost- und Westdeutschland. *Gender*, 3, 59-73.



## A divergent convergence: welfare and gender in West and East German regions after the unification

Gyu Seong Hwang\*

While gender arrangement of West Germany before the unification was characterized by a moderate division of labor, East German one was distinct by relative equality. After the unification developments of gender arrangements in East and West German regions have taken three phases. During the first period(1990~1997), whereas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the West remained stable East German gender equality had faced a great tension. East German gender arrangement managed to have adapted to changed environments but, West German one was hit by socio-economic crisis in the second period(1998~2005). In the third stage(2006~) gender arrangements in both regions have experienced qualitative change against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e course of these developments gender arrangements of both regions have maintained differences although they seem to move toward a same direction owing to deficit of sustainability of Western model and that of feasibility of Eastern one respectively. Among others increasing female part-time employment has established additional breadwinner model(Zuverdinermodell) in West in contrast to the prevalence of dual breadwinner model in East. Secondly while Eastern part of Germany has marched to dual breadwinner model with external care defamilialization of child-care has proceeded moderately in West despite the common tendency toward increasing socialization of child-care to a remarkable degree. Third, East German women have better performance in economic independence than their Western sisters. But traditional idea about gender labor division regard-

---

\* Research Professor, Hanshin University(kyuseong.hwang@gmail.com)

ing major role of women as house work and caring has diminished to a great degree in both regions making optimistic prospect for gender arrangement to advance toward dual breadwinner- dual (or institutional) care model.

**Key Words:** German unification, gender equality, gender division, welfare, care

◆ 2015.02.14. 접수 / 2015.03.11. 1차 수정 / 2015.06.08. 게재 확정

[부표] 동서독 지역의 성별 고용지표(%)

	고용률				시간제 비중				실업률			
	서독지역		동독지역		서독지역		동독지역		서독지역		동독지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1	78.4	54.6	78.5	56.7	2.3	34.3	1.2	17.5	5.6	7.0	8.7	11.9
1992	78.1	55.6	71.5	57.7	2.5	35.1	1.0	15.6	6.0	7.1	10.6	18.5
1993	76.4	54.8	68.8	55.3	2.6	36.1	1.3	16.5	7.8	8.3	11.3	19.9
1994	75.2	54.7	69.1	56.2	2.9	36.6	2.5	20.4	9.0	9.1	11.3	20.4
1995	74.7	54.5	70.5	57.5	3.2	37.3	2.9	20.7	9.1	9.0	11.3	18.5
1996	73.7	54.9	68.5	57.6	3.6	37.4	2.4	19.0	10.1	9.7	14.1	19.2
1997	73.1	54.8	67.1	56.7	4.2	39.1	2.8	20.5	11.0	10.5	16.7	21.6
1998	73.1	55.3	66.3	56.4	4.5	40.0	3.3	21.6	10.4	10.2	17.5	21.0
1999	73.6	56.7	67.3	57.9	4.8	41.7	3.6	22.0	9.7	9.6	17.3	20.2
2000	74.3	57.7	66.7	57.7	5.0	41.9	3.9	22.8	8.5	8.3	17.8	19.3
2001	74.4	59.0	65.7	57.9	5.3	43.1	4.5	24.4	8.3	7.7	18.5	19.0
2002	73.6	58.9	64.5	58.1	5.6	43.7	4.8	24.9	9.1	7.8	19.5	18.9
2003	72.5	58.9	64	58.3	6.1	44.7	5.7	26.5	10.2	8.3	20.6	19.6
2004	71.7	58.5	62.9	58.1	6.2	45.3	6.3	27.8	10.3	8.4	20.6	19.5
2005	73.3	59.7	63.5	58.8	7.0	47.4	9.0	32.0	11.3	10.8	21.3	19.7
2006	74.5	61.5	65.9	60.8	8.5	49.0	10.5	34.2	10.1	10.2	19.5	18.8
2007	76.0	63.1	68.9	63.0	8.5	49.0	11.0	35.0	8.0	8.7	16.6	16.8
2008	77.0	64.1	70.6	64.9	8.5	48.7	11.2	35.5	7.0	7.4	14.8	14.5
2009	76.3	64.7	71.3	66.8	8.8	48.6	11.3	34.5	8.1	7.3	15.5	13.4
2010	76.6	65.5	72.8	68.2	8.8	48.7	11.3	34.6	7.8	7.1	14.4	12.3
2011	77.8	67.1	74.0	69.3	9.3	48.7	11.2	34.9	6.9	6.5	13.4	11.8
2012	78.4	74.6	67.6	69.3	9.5	48.5	11.8	35.0	6.8	6.4	12.7	11.1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Bundesagentur für Arbeit.